

기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하게 소용돌이 쳤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과 여기에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전쟁의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것이 작년 하반기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에게 대화를 거듭 제의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대외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밝히고 우리 정부와의 대

북한에서도 경제 살리기가 핵심 과제

화를 받아들이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3자간 특사가 교환되었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활발한 정상외교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2차례 남북정상회담, 3차례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최악의 독재자이자 문제아로 손가락질 받았던 김정은이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적 주목 받게된 김정은

남북간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판문점선언을 발표했고,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간의 관계 회복과 경제적·협력의 확보를 약속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약속하였다. 김정은은으로서 비핵화라는 협상카드를 활용하여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비핵화과정이 북미간의 견해차이로 정체상황에 처해 있

는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최소한의 출발점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중국방문(6.20)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은 6월말부터 거의 한달 넘게 현지지도라는 이름으로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경제부문을 챙겼다. 신의주지역에서 출발하여 백두산 주변의 삼지연지역과, 함경북도를 거쳐 강원도까지 돌아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기업 관리 일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군기를 잡고' 있다. 최근의 핵무력 완성을 통한 '군사강국' 건설과 정상회담들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과 내각의 관계자들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경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외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과 조급함이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해 북한경제 성장률은 3.5% 하락한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경제제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북한

의 대중국 무역은 13.2% 감소하였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대중국 교역이 작년 동기 대비 56% 축소되어 북한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경제노선이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북한당국으로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제재 완화 바라는 북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완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이 미군유해 50구를 송환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한 것도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8월 3일에는 추가제재를 단행하는 등 강경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어 북한당국의 조조함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사설 정부, 광주수영대회 지원 적극 나서라

광주세계수영대회가 개최비용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또 선수단을 수송할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니 걱정이 앞선다. 국제대회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리 녹록지 않은 모양이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전반적 부문을 챙기며 준비하고 있다. 대회준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더불어 선수들을 실어나를 교통수단 확보는 필수적 요소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했다는 반증이다.

예산에 있어 조직위는 53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총사업비는 1,697억원이다. 그러나 경기장 변경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150억원이 늘었다. 운영비

도 항공료와 호텔객실 단가 과소계상, FINA 측의 요구 및 여건변동으로 38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도 추가적 국비지원 없이 광주시가 부담한다'는 협약서에 윤장현 전 시장이 사인했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광주시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당시 윤 시장은 정보보장이 필요하다는 FINA의 압박에 못기겨서 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수단과 관람객 수송대책도 비상이다. 광주-인천공항 간 KTX 운행이 9월부터 중단돼 우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수영대회는 200여개국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준비가 부족할 경우 개최도시를 물론 국가적으로도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 정부는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기료 누진제' 개선 근본대책 필요

정부와 여당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7월 협의의 틀 갖고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진제 상한선 구간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 상한을 각 100kwh씩 상향해 요금 부담을 줄였다. 이를 현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에 이르며,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19.5%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로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적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으로 제대로 냉방을 하는 것을 주저했던 국민에게는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한시적 요금 경감

은 국민적 불편과 부담 해소는 물론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을 감안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세계기후변화로 한반도는 앞으로 폭염과 혹한 발생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년 재난수준의 일기 악화가 이어질 때마다 땀질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현 누진제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요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함께 손질해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전기요금제 대수술이 필요한 대목이다. 누진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다른 전기요금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자투고 작은 관심만으로도 사이버범죄 예방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한층 편리해졌고, 스마트 폰의 대중화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가져다준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쇼핑물 사기, 피싱, 스미싱, 계정도용,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최근 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인들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이메일인 것처럼 위장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수신자로 하여금 이를 열어 보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이와 같이 이메일이 열리면 교묘한 방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범인들이 각종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되고, 범주는 현대를 살아가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황민애 나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사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불명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의 최고의 예방방법은 사용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주의·예방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필수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봉철의 알짜배기 골프

38 -1 허균의 골프경영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재 문장가로 불리우는 허균은 학자, 문인, 정치가, 개혁가로서 5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9살 때는 뛰어난 시를 많이 지은 최초의 시문장가이다.

허균은 인텔리기문 출신이지만 세상평화를 위해 서자를 위한 스승으로 저항의 아이콘이다. 서자 출신의 유명한 학자인 이달에게 시를 배운 탓에 허균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정이 많아 간절한 애초의 마음을 가진다. 그의 스승이, 그의 친구가, 그의 제자가 서얼이었다. 자유분방한 기질과 사상으로 봉건도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참된 개성과 본성을 옹호하고 감정을 해방하고 했던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라는 호민론의 스승을 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재론의 스승을

고발정신과 저항정신으로 스윙하라

하면서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고 흥길동전으로 세상을 표현한다.

개성이 강한 조선 최고의 반항아이자 괴짜였던 허균은 상당한 미식가였다. 스스로 나는 평생 입과 배만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미식가와 탐식가의 위치에서 페어웨이를 공략한다. 음식의 향기와 빛깔까지 살피는 음식칼럼니스트다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라운드의 기백은 독보적이다. 푸줏간 앞에서 입맛을 다신다는 뜻의 도문대작은 조선 팔도의 별미를 소개한다.

허균은 획기적인 사상가이자 불운한 사상가이다. 스트로크게임이나 스킨스 게임 등 각종 게임을 주도하면서 내기 라운드의 부정과 고수들의 아집을 비판하고 스포츠맨십에 의한 대개혁적인 라운드를 바라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시문장을 자연속에서 동반자들에게 전달한다. 허균은 흥길동전 외에도 유교적 신분사회에서 소외당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현실고발 성격의 5편의 전을 짓는다. 엄저사전, 손곡산인전, 장산인전, 장생전, 남곡선생전 등이다. 소설 외에도 수많은 시를 쓰면서 고수로서의 경륜을 쌓아간다. 하지만 순탄치 않는 관직생활



로 여러번의 파직과 유배, 복직 거듭하면서 불의에 가산몰수 당하고 혁명가는 능지처참형으로 불의의 참형을 당한다.

천지간의 괴물, 약 중의 모든 악을 지닌 인물 등 조선시대부들께 좋지 않은 인물로 낙인찍혔으나 조선시대 기록권 방어를 위한 승자의 기록일까? 이에 반해 오늘날 소설을 가장 먼저 개혁해냈던

인물로 허균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시대의 이단아는 문장과 식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람됨에 대해서는 경박하다거나 인륜도덕을 어지럽혔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사대부의 자제로서 유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당대의 권위에 감화도 도전했던 그의 고발정신과 저항정신, 그리고 개혁의지와 냉철한 현실인식은 사회개혁의 스윙을 과감히 개혁한다. 비기너들은 우호적이지만 지배하는 고수들에게는 매우 과격한 생각으로 체제를 부정하는 모반사상이다. 호민의 혁명이론과 민본사상과 내정개혁, 청의 침략에 대비하는 방책과 신분차별의 타파는 당정의 폐해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정치가로서 개혁을 주장한다.

허균은 3일만에 예기치 못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다. 체제 붕괴의중 계획이 탄로되면서 심복들과 함께 의금부로 압송되어 능지처참의 처형을 당한다. 고발과 저항의식 가진 천재는 조선왕조가 끝날때까지 유일하게 복권되지 못한 역사속의 불행한 인물로 남겨진다.

골프칼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기고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미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누계평균벌점을 1점 이상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주택선분양 제한의 문제점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대상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 도입되는 규칙에 의하면 적용대상이 종전 사업주체에서 시공업체까지 확대되었고 영업정지처분기간별로 1개월이하는 아파트골조공사 3분의 1 완료, 3월미만~1월초과는 골조공사 3분의 2 완료, 6월미만~3월이상은 골조공사완료, 6월이상은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지고 부실공사로 2년 평균 벌점이 1점을 넘어도 선분양이 일부 제한된다.

정부의 이번 제도마련이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일단 동의하지만 이미 과거에 유사한 사유로 영업정지와 벌점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여기에 소급적용까지 한다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향후 법적용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든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평균벌점은

건설업체가 2년동안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는 시스템으로, 지난 2년의 부실공사를 반영해 제재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 2년 전에 벌어진 부실시공으로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법 시행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부터 받은영업정지나 벌점에 의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 시행 이전 과거 2년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인 것이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등에선 제재규정을 신설·강화할 경우 경과규정을 둬으로써 법 개정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벌점 1점을 넘어 제재대상이 되는 업체는 단 2개사에 불과했고 중소건설사는 100여개사가 넘어 이 업체들은 향후 시공수주 자체가 어려워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따라서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정해진 현행 벌점의 산정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제도는 발주청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만큼 을의 입장이 시공사의 입지가 약해져 있다. 발주청에서 낮은 시공단가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더라도 벌점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건설사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일삼은 발주기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부실벌점등으로 인해 선분양을 제한받게 되는 주택사업의 사업주체와 시공업체는 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 통해 건설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가뜩이나 주택부동산 규제강화로 주택공급물량이 대폭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선분양을 제한하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이중규제와 소급적용등의 위헌가능성을 배제시킨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정호 사장·발행·편집인 김용환 상무이사권병진국장 이도환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